

<div data-bbox="204 293 571 383" data-label="Section-Header"> <h1> 보도자료 </h1> </div> <div data-bbox="263 405 512 450" data-label="Text"> <p>2025. 2. 17.</p> </div>	<div data-bbox="639 241 767 367"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948 266 1272 338" data-label="Section-Header"> <h2> 양형위원회 </h2> </div>	
<div data-bbox="702 427 780 472" data-label="Text"> <p>문의</p> </div>	<div data-bbox="989 405 1305 490" data-label="Text"> <p>운영지원단장 문중흠 (☎ 02-3480-1924)</p> </div>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20차 공청회 개최

-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성범죄 양형기준안 대상 -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2025. 2. 17.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동물보호법위반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20차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 및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함

① 공청회 개요

- 일시: 2025. 2. 17.(월) 14:00 ~ 18:00
- 장소: 대법원 1층 대강당
- 방청: 현장 방청 및 온라인 생중계(대법원 유튜브 채널)
- 사회: 최 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 발표: 김세종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지정토론

[사기범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박소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정유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박중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박미랑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서국화 (법무법인 올림 변호사)

[성범죄 양형기준안]

- 박현주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선미화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경정)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② 양형기준안 개요

- 각 양형기준안과 그 설명자료는 공청회 자료집 참조[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공청회·양형연구회' 탭 - '공청회·공개토론회' 탭에서 다운로드 가능]

③ 공청회 지정토론 요지

* 지정토론문 원문은 공청회 자료집 참조

■ 사기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1. 양형기준 일반

- ☞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큰 양형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도 양형기준을 규범적으로 조정하여 **사기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의견(박소현 입법조사관)

2. 유형 분류

-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전체 범행에 대한 고의로 피해액을 수거한 수거책의 경우 우연히 수거하게 된 금액을 이득액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이득액이 아닌 가담유형별로 별도로 유형화**하자는 의견(박소현 입법조사관)
- ☞ 1인 범행, 비조직적 범행이라도 불특정·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경우 조직적 사기의 수준으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현행 '조직적 사기' 유형을 '불특정·다수대상 사기' 유형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정유철 변호사)
- ☞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라는 비례적 정의의 측면에서, **유형구분의 기준이 되는 '이득액'은 형식적 이득액이 아니라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정유철 변호사)

- ☞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법정형이 형법상 사기죄보다 높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액의 규모와 낮은 환급률 등을 고려하면,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박중욱 부연구위원)

3. 권고 형량범위

- ☞ 형량의 강화가 바로 범죄예방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고 사회적 비용도 많이 소요되며, 사기를 (보통 동기) 살인과 유사하게 처벌하는 것이 우리 사회구성원의 일치된 의견인지 의문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상향이 소위 ‘형량 인플레이션 현상’이 아닌가 우려**된다는 의견(정유철 변호사)

4. 양형인자

- ☞ 현금 수거, 인출, 전달 등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행위분담임에도** 이를 ‘단순 가담’으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의견(박소현 입법조사관)
- ☞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모두 삭제한 것은 타당**하고, 형사공탁의 양형상 고려 여부 및 그 정도 등에 대하여는 법관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박중욱 부연구위원)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1. 설정 범위

- ☞ 대포통장은 신종 사기범죄를 통해 얻는 범죄수익을 세탁하기 위한 핵심수단이므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를 **새로이 설정 범위에 포함**하고,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박중욱 부연구위원)

2. 권고 형량범위

- ☞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점과 평균 형량의 상승 등을 고려하면, **소유형 2(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의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정유철 변호사)

3. 양형인자

☞ 조직적 범행에서 ‘단순 가담’을 특별감경인자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조직적 범행에 이르는 못하더라도 수인이 관여한 범행에 있어 각각의 가담 정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특별양형인자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박소현 입법조사관)

4. 집행유예 기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상당수는 생활비를 벌기 위한 생계형 범죄로서 실무를 고려하면 ‘생계형 범죄’가 일반참작사유에서 주요참작사유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정유철 변호사)

■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1. 양형기준 일반

☞ 동물보호법위반 양형기준 설정의 최우선 목적은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양형이지만, ‘어떻게 해야 동물을 보다 온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김광현 입법조사관)

☞ 양형위원회의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마련은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상당히 신속한 대응이라고 평가할 만하다는 의견(박미랑 교수)

2. 설정 범위

☞ 온라인을 통해 동물학대 행위가 확산되고, 경제적 수익을 위한 범행으로 연결될 사회적 위험성이 있으므로,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호)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국화 변호사)

3. 유형 분류

☞ 범죄 유형을 피해동물이 죽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2가지로 분류한 한 것은 지나치게 피해 결과 중심으로 단순화한 것이고,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유형 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박미랑 교수)

4. 권고 형량범위

- ☞ 벌금형만으로 교육·교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국민 대다수가 동물학대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수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소유형 1의 가중영역에서 벌금형 권고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김광현 입법조사관)
- ☞ 감경영역에 전체 벌금형 선고 건수의 98.2%를 포섭할 수 있고, 통상 감경영역에서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을 고려한 것은 **2023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전에 선고된 판결 분석에 의존한 결과가 아닌지 우려**된다는 의견(박미량 교수)
- ☞ 다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보호법위반범죄도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권고 형량범위가 다소 낮다**는 의견(서국화 변호사)

5. 양형인자

- ☞ 피해동물이 무주이거나 가해자 소유인 경우 피해 회복에 취약하므로, 피해동물에 대한 치료 등 촉진을 위해 소유형 2(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치료를 통한 무주의 피해동물이나 자기소유 피해동물의 건강 회복’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김광현 입법조사관),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길고양이 혹은 야생동물과 같이 소유자가 없거나 그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박미량 교수)
- ☞ 동물학대의 양상이 죽이고 동물 사체를 해부하고 능욕하는 과정까지 촬영, 게시하는 방법으로 진화하였음을 고려하여 **특별가중인자인 ‘잔혹한 범행수법’의 적용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박미량 교수)
- ☞ **동물대상 범죄가 반복성과 상습성을 특징**으로 함에도 범죄자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과 관련하여 ‘범죄의 반복성, 피해동물의 수’가 주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국화 변호사)

6. 집행유예 기준

- ☞ 동물보호법위반 행위자가 처벌받은 이후 **피해동물에 대하여 재차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동물에 대하여 추가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를 **집행유예의 부정적 참작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박미량 교수)

■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1. 양형기준 일반

☞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전체 성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여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하였고,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와 맞물려 있어 **근로자의 노동권·인격권 보호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므로, 이번 양형기준 설정은 환영할만하다는 의견(박현주 변호사)

2. 설정 범위

☞ 2021. 3. 23. 신설된 **성착취목적대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선미화 경정)

3. 유형 분류

☞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은 보호법익 및 행위의 태양 등에 있어 추행범죄와 엄연히 구별되므로, **대유형 1, 중유형 다의 의제추행 다음에 위치시켜 추행범행과 구별하고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감경영역 ~1년6월, 기본영역 1년~2년6월, 가중영역 2년~3년)하자는 의견(박현주 변호사)

4. 권고 형량범위

☞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성범죄자의 사회적 격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음에도 법정형 상한에 비해 권고 형량범위가 전반적으로 낮으므로,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선미화 경정)

☞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의 권고 형량범위가 그 행위태양, 유사 범죄의 양형기준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낮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김혜정 소장)

5. 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인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를 유형력의 행사를 동반하지 않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에까지 적용**한다면 가해자에게 이유 없이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박현주 변호사)

- ☞ 공탁의 양형상 고려는 재판부에서 여러 양형요소들과 함께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을 삭제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박현주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등에서도 ‘(공탁 포함)’이 삭제되어야 하고, ‘상당한 피해 회복’ 개념이 모호하여 정의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김혜정 소장)
- ☞ 특별가중인자인 ‘윤간’을 ‘2인 이상 범행 가담’으로 표현을 변경하자는 의견(박현주 변호사),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는 성적 행위를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평가하는 것이므로, 이를 폐기하거나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로 통합할 필요가 있고, ‘윤간’의 용어를 ‘집단범행’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김혜정 소장)
- ☞ 일반가중인자로 설정되어 있는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를 특별양형인자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마약류 등 약물 이용’이라는 수단이 특별양형인자인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와 비교하여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선미화 경정)
- ☞ ‘동종 전과’의 범위에 디지털 성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성매매범죄가 포함되어야 하고, 일반가중인자인 ‘비난 동기’의 정의규정에 ‘피해자가 소속된 동질 집단에 대한 혐오 또는 증오감’을 추가하자는 의견(김혜정 소장)

6. 집행유예 기준

-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성폭력에서 사회적 지위와 자원을 이용하는 경우를 방면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집행유예 참작사유 중 ‘사회적 유대관계’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김혜정 소장)

4] 향후 일정

■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의 검토 및 반영

- 양형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조회, 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시되는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전문위원 전체회의를 거쳐 2025. 3. 24. 제137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기범죄 수정 양형기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정 양형기준,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